

		시 민				
문서번호	정보화기획담당관-11644	주무관	정보화기획팀장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단장	행정1부시장
결재일자	2012.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총무과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31호					



개방·공유·소통의 열린시정 2.0 종합 추진계획(안)

2012. 8



서울특별시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
	● 전 문 가 : 유 ■ (정보공개전문가, 법조인, 기록전문가)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무 □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 타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유 ■ (행정안전부) 무 □
	● 민 간 단 체 : 유 ■ (정보공개관련단체) 무 □
	● 기 업 : 유 ■ (공공데이터 이용기업) 무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관 계 기 관 : 유 □ () 무 □
	● 관 련 단 체 : 유 □ () 무 □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서울시 현황 및 문제점	2
III . 그간의 추진경과	5
IV . 열린시정 2.0 비전 및 정책방향	6
V . 추진과제	8
1.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	8
2. 정보공개 제도개선 및 문화 조성	10
3. 공공데이터 공유	11
4. 비정형 문서 공개 확대	15
5. 기록정보 소통체계 정립	17
6. 서울 정보소통광장 구축 및 고도화	19
7. 열린시정 2.0 민관 협력 추진	21
VI . 추진체계 및 일정	22
VII . 소요예산	25
VIII . 행정사항	25

별첨: 개방·공유·소통의 열린시정 2.0 선언문(안) 1부.

개방·공유·소통의 열린시정 2.0 추진계획(안)

시정 정보의 개방·공유·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투명성 제고 및 시민참여 확대, 공공정보의 가치를 증진코자 함

I 추진배경

소통, 협력, 참여의 열린시정 2.0 (공약)

- 시정 정책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정 패러다임 전환
-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문화로 만들어 적극 장려

공공정보 개방 및 민간 활용이 스마트 시대 패러다임

- 공공정보는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융합하여 유용한 공공 서비스 생산, 민간 부가가치 창출



서울시 공공정보 경제적 가치 2조 1천억원
(2012. 4월 서울대 연구발표)

- 공공정보는 시민 소통, 참여의 촉매제 역할
- 미국, EU 등 선진국도 공공정보의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식, 거버먼트 2.0 운동과 다양한 개방·활용 정책 경쟁적으로 추진

미국	오바마 “투명하고 열린 정부” 국정운영방침 발표(’09) ▷ 데이터 통합저장소 오픈 : Raw-Data 공개	
영국	7,000여개 공공정보 민간에 개방(’10)	
호주	범정부 정보공개 기본정책 수립 및 전담기관 설치(’11)	

II 서울시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행정정보와 시민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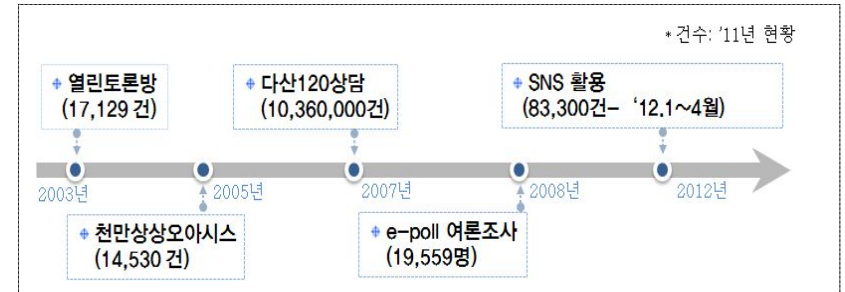
- 행정정보 보유 및 생산 기반
 - 전자기록물 42,000천건 보유, 연간 전자문서 생산 2,000천건 등
 - 400여개의 정보시스템, 200여개의 홈페이지
- 시민의 시정 관심 및 참여
 - 연간 시 홈페이지 방문 57,156백명, 정보공개청구 5천건 등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918백명, 3대 SNS 회원 51백명

〈서울시정 규모와 시민 관심도〉



□ 열린시정을 향한 그간의 노력

- 행정정보 공개
 - '00. 10. 25 「서울특별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 '06년~'11년 12,050건의 공개청구에 대해 11,104건(92.2%) 공개
- 온·오프라인 시민참여 채널 운영



□ 외부에서 보는 서울시 열린시정

- 정보공개 청구 공개율('06~'10년) 16개 광역 시도 중 꼴찌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



○ 언론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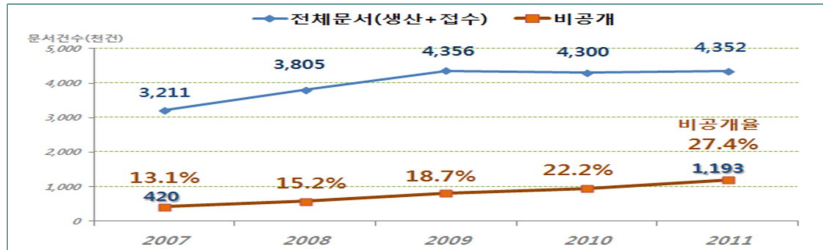
- 정보 비공개 85% 증가 ('08.10)
- “서울시 정보공개는 시늉만 내고 있다” ('12.2)
- 서울시 헛구호 그친 시민 알권리 보장 ('12.7)

2 서울시 열린시정 문제

□ 행정정보 시민 주권의식 부족, 공개 거부감 팽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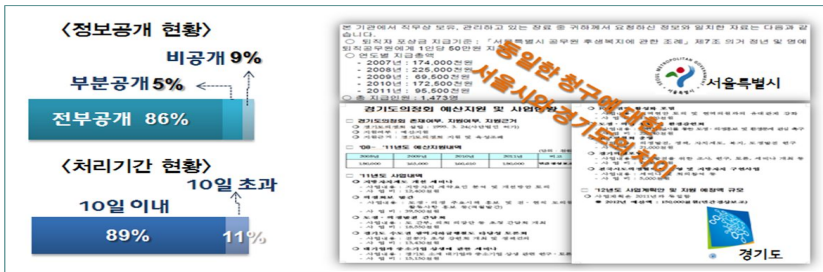
- 생산시점의 문서 비공개율 27.4% ('07년 대비 109% 증가)

〈 정보 비공개 사전결정 현황 〉



□ 최소·형식적 정보공개 의 관행

- 정보 청구시 전부공개는 86%, 처리기간 10일 초과 11%
- 타 기관에 비해 공개정보의 상세성 부족



□ 행정정보의 민간 개방, 공공활용의 가치 인식 부족

- 개방·공유 보다 보안·보호 우선 정책으로 원천적 비공개 마인드
- 시민 정보서비스는 공공에서 직접 예산으로 제작·배포하는 관 위주의 전통적 서비스 방식 유지
- 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 : '12.5월
 - 세계 선진도시 보다 늦음 - 뉴욕(미) '09년, 에드먼튼(캐) '10년

III 그간의 추진 경과

①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드는 시민참여형 정책개발: '11.11~'12.5

- 외부전문가 참여, 소그룹 또는 위원회 검토·자문 : 총11회 128명
- 시장, 행정1부시장, 시간부 참여 내부 검토 보고회의 총11회

② 열린시정 2.0 추진계획 수립 및 로드맵 작성: '12.1~'12.5

- 정보화기획단 자체 TF팀 운영 : 2개월간 내부직원 8명
 - 보유 정보유형 및 공개현황 분석, 열린시정 2.0 종합계획 및 세부과제 도출
- 열린시정 2.0 선언문(안), 알권리 10대 원칙 마련 : [별첨]
 - * 열린시정 2.0 정책선언 및 정보소통광장 개설계획 수립 ('12.4.10, 행정1부시장방침 192호)

③ 시정정보 공개·공유포털 “서울 정보소통광장”개설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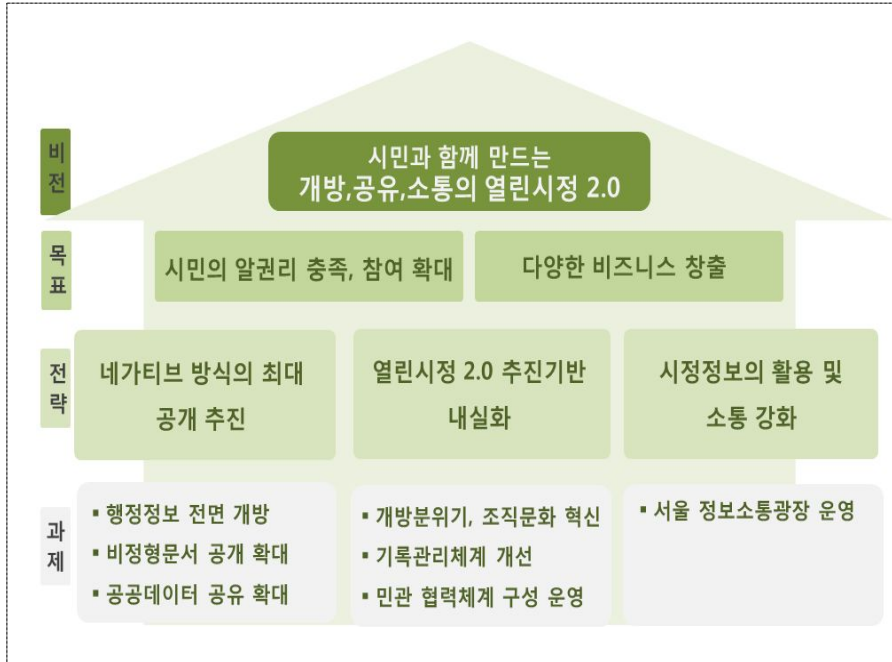
- 홈페이지 시범 운영 : '12. 5. 8(화) ~
- 열린시정 2.0 자문위원 온라인 자문 : 5.17 ~ 5.30
- 홈페이지 조기 활성화를 위한 공표, 회의록 등 일부 메인 연계

④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직원교육, 처리실태 조사

- 과장·팀장·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12.2~3월)
- 쏘부서 대상, 정보공개 처리실태 점검('12.3월)
- 비공개 가이드라인,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연구용역 추진('12.4월~8월)
- 최근 5년간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실국 합동 점검회의 개최('12.5월)
- 시민단체와 공동 정보공개 워크숍 개최('12.7월)
- 간부·과장·팀장 대상 정보공개·정보소통광장 교육 실시 : ('12.7월)

IV 열린시정 2.0 비전 및 정책 방향

□ 열린시정 2.0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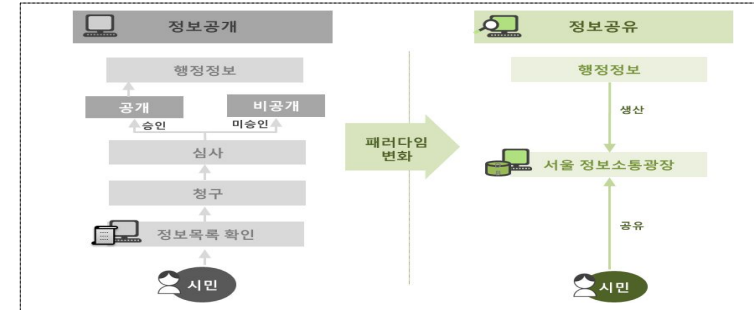
□ 열린시정 2.0 정책방향

○ 소극적, 방어적 최소 공개에서 **네가티브 방식의 최대공개**

-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체계적 생산, 관리, 유통, 보존
- 정보공개 의식 및 문화의 일대 혁신 추진
- 관련 법·제도의 정비·보완, 공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관점의 공개정책 실행
- **열린시정 2.0 선언문, 시민 알권리 10대 원칙 마련(별첨1)**

○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를 넘어 **사전개방, 정보공유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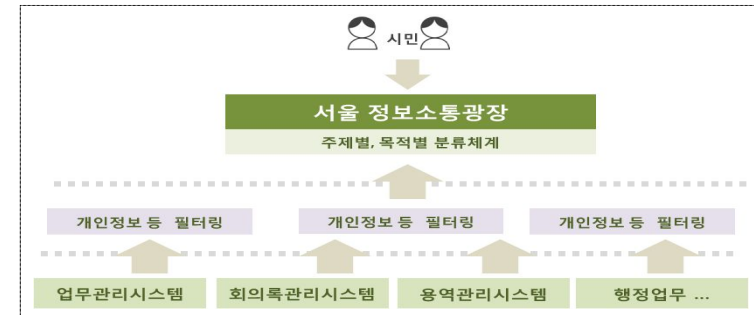
- 행정정보의 오너쉽(Ownership)은 시민
- 시민이 요구하기 전에 공개·공유하여 시민 정보접근 간소화



- 공유정보의 시민활용 극대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유도

○ 담당자·부서중심의 개별공개에서 **시스템에 의한 자동공유 기반 조성**

- 정보 공개·공유의 범위·기준에 의거 자동화 시스템 단계적 확대
- 정보공개의 사각지대 제거 및 공무원 임의 판단 여지 최소화



○ 분산된 공개 창구를 **공개·공유를 위한 통합 창구로 일원화**

- 정보의 주제, 목적이 명확한 정보 공개·공유 단일 창구 서비스
- 편리한 정보이용 환경, 상호 소통이 활발한 라이브 사이트

V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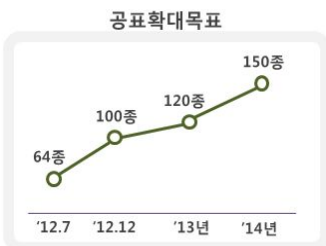
1 행정정보 전면 공개 추진 - 행정국

1. 사전공표대상 지정 업무 대폭 확대

공표 현황 : 64종 (정기 26종, 수시 38종)

추진방향

- 공표 대상 정보 적극 확대
 -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 및 공개 청구가 많은 정보 사전 공표 추진
 - '14년까지 150종으로 단계적 확대
- 공표 창구 일원화 : 서울 정보소통광장



추진일정

- 공표 대상 정보 추가 발굴 : '12. 4 ~ 8월
- 조례 반영 : '12. 9월

2. 사회적 관심사업의 과감한 사전공개

- 선정기준 : 언론보도, 의회 지적, 감사·정보공개 청구가 많은 사업 등
- 공개대상 : 사업기획부터 완료까지 흐름을 알 수 있는 문서
- 공개내용 : 사업설명서, 전체 문서목록, 전체문서
- 공개형태 : 서울 정보소통광장에 게재 사전공표

3. 전자결재문서 공개

추진방향

- 내부 핵심 정책결정 문서의 공개 기반 구축
- 공개 가능한 문서의 최대 공개, 시민의 정보이용 및 활용 편리성 강화

공개내용

- 공개대상 :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전자문서
 - 전자문서 생산현황 : '11년 2,028천건 / '10년 : 1,863천건
 - 국장이상 결재문서 : 86,000여건/년평균(4%)
- 공개범위 : ('13년) 국장이상 결재문서 ⇒ ('14년)과장이상 결재문서
 - ※ 직원 복무, 인사발령, 교육, 일상경비 지출 등의 행정지원 업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 공개정보 : 문서제목, 등록번호, 결재선, 본문·첨부파일

4. 중요 기록물 열람서비스

생산문서 목록 공개

공개순위	기록물 유형	목록	공개시기
1	DB구축 문서	319,600건	'12.10월
2	전자문서('98~'12.4)	20,652,676건	'13년 상반기
3	기타 보존 문서	5,178,024건	'13년 하반기

중요 기록물 공개

- DB 구축된 역대 시장결재문서 공개('12.10월)
 - 원문공개 가능한 기록물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원문공개 대상 확대

2 정보공개 제도개선 및 조직문화 조성 - 행정국

1. 최대 공개를 위한 제도정비 및 기준 마련

□ 부적정한 비공개 정보의 제로화 추진

- 모든 비공개결정에 대한 직권심의제 신설
 - 기존 신청에 의한 정보공개심의를 신청 없이 모두 직권심의 실시
- 정보공개 책임관 및 분임책임관 지정 활용
 - 소속 직원 교육·자문역할 수행 및 자체 정보공개 처리실태 모니터링 및 개선

□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보급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업무매뉴얼 정비 : '12. 9
 - 정보공개심의회, 용역결과, 판례, 실국 자체 검토 자료를 축적하여 지속 보완
- 행정정보 공개 조례 개정 추진 : '12. 9

2. 정보공개 마인드 내재화 및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관리

□ 정보공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교육 지속 실시

- 주제별·대상별 정보공개 교육 정례화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
-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공유, 정보공개 분위기 확산

□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만족도 관리

- 정보공개 처리 스피드 지수 도입
- 모니터링단 및 정보공개 청구자 대상으로 정보공개 전반 점검 및 만족도 조사
- 부존재 결정의 입증책임성 강화

3 공공데이터 공유 - 정보화기획단

□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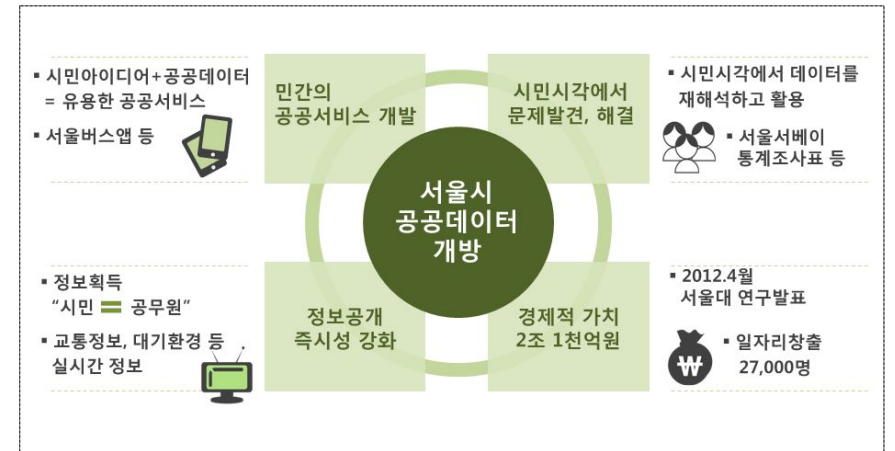
-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서울시 공공데이터 무료 개방 확대
-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기회 제공 및 IT산업 육성·발전 지원

□ 서울시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및 공유 가치

-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 총 400종, 공개가능 150종(39%)

순번	분류	종수	순번	분류	종수
1	교통	14	6	보건	3
2	안전	9	7	복지	6
3	환경	12	8	산업경제	8
4	일반행정	42	9	문화(체육)관광	38
5	도시관리	17	10	교육	1

- 서울시 공공데이터의 가치 및 개방·공유 효과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체계적 준비 및 개방

- 공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통합 플랫폼 구축 : '10.10 ~ '12.5
 -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 표준기술 기반의 플랫폼 구축
 - 서울시 보유 공공정보 DB 현황조사 및 목록작성
 - 공유 DB 통합 관리 인프라(서버, 디스크, 보안시스템, 시스템 SW 등) 구축
 - 서울시 공공데이터 공유 포털(열린데이터광장) 구축
- 공공데이터 개방 지침 및 약관 마련
 - 개방·공유 중심의 민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원칙 「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 지침」 및 시민이용약관 13개 조항 마련
- 「열린 데이터 광장」 개설 및 시범오픈 : '12. 5. 21(월)

서비스 주소 : <http://data.seou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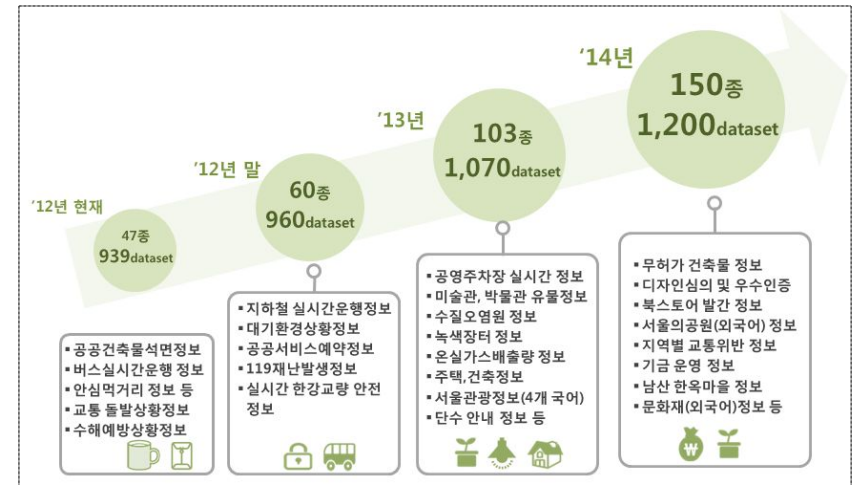


- 시민의 접근성, 활용성을 극대화한 공공데이터 공유 포털 플랫폼
- DataSet 제공 : OpenAPI, Sheet, Chart, Map, File, Link
- 서비스 데이터 : 47종 DB, 939개 Dataset('12.8 현재)

□ 향후계획

- 공공데이터 공유 단계적 확대 추진 : '12 ~ '14년
 - 공공데이터 목록 전체 공개 및 시민 수요 조사 : '12년 하반기
 - 시 산하기관, 민간 보유 서울시 정보 등 유용한 DB 지속 발굴·확대 : '12년 ~
 - 공공데이터 공유 단계적 확대 계획

구 분	2011	2012	2013	2014
DB공개 목표	20여종	60종	103종	150종
비율(공개DB 150종)	15%	40%	70%	100%



※ 2014년까지 공개 가능한 데이터 전면 개방(시 산하기관, 자치구 포함)

-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강화 : '12.7~12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 : '12.7~11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표준 가이드 및 세부 운영지침 수립 : '12.12

○ 공공데이터 활성화 및 민간 활용지원 체계 마련 : '12 ~ '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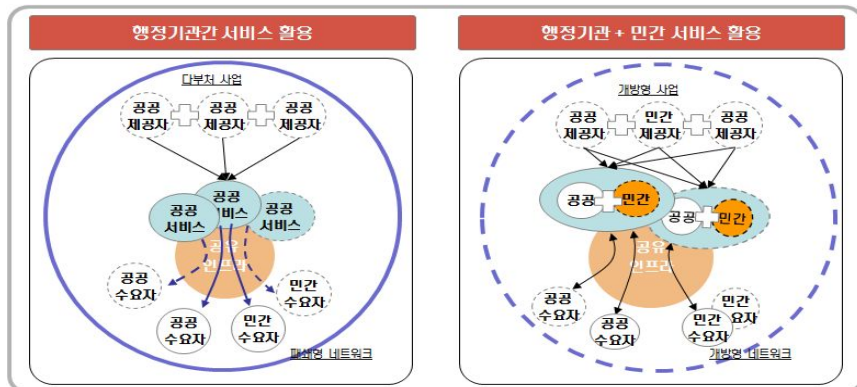
- 앱 공모전, 우수사례 시상 등 공공 데이터 활성화 유도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앱 개발 공모전 개최 중 : '12.6 ~ 8월
 - 활용 갤러리를 통한 OpenAPI 등 활용(앱, 포털 등) 사례 공유, 우수작 시상 등 민간 활용지원 체계(센터) 마련 : 2012 ~ 2013
-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체계 및 운영방안 수립, 시범 운영
 - 센터 규모의 조직 마련 : 서울시, 행정기관간, 공공·민간 활용 지원

○ 포럼 및 기술자문단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추진 실행력 강화 : '12년 ~

- 데이터 포럼(스마트 서울 포럼 분과), 열린데이터기술자문단 구성·운영
- 자치구 협의회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 협력 체계 구성·운영
- 공공 기관간 협력, 민간 기업의 참여·피드백 등 협력 체계 마련

○ 단일 DB 제공방식에서 DB 융·복합 제공방식으로 전환 : '13년 ~

- 행정기관간, 공공·민간 공공데이터 통합 및 공유, 유동 체계 마련
- 공공데이터 활용이 용이하도록 코드 체계 통합 및 표준화 선행
- 오픈 플랫폼, 빅데이터, 클라우드 DB 등 로드맵 수립 및 시범 적용



4 비정형 문서 공개 확대

※ 비정형문서 : 회의록, 업무계획, 학술용역보고서, 기술용역보고서, 연설문 등 전자결재문서시스템에서 관리되지 않는 문서

□ 회의 전면 공개

- 공개대상 : 정례적 회의 4종, 위원회 회의 93개(회의록 86, 회의록 열람 7)
 - ※ 공개대상 공식 위원회 별첨
- 공개기준 : 모든 회의는 원칙적 공개
 - 개최 5일전에 사전공지, 결과는 종료 후 7일 이내 공개
 - 비공개 대상이 있을 경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비공개 결정 방법

- 위원회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비공개 내용과 사유는 정보공개심의회(총무과)로 통보 후 비공개 여부 적정성 심의

- 공개방법 : 회의 성격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 녹화 동영상, 회의록으로 공개수위를 달리하여 맞춤형 공개 시행

- 인터넷 생중계 : 시 인터넷 TV, 아프리카, 올레언어 등으로 실시간 생중계
- 녹화동영상 : 정책개발단계에 있는 사안을 다루는 실국장간담회는 녹화 동영상 공개
- 회의록 : 개요, 참석자, 안건, 주요 발언내용,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

- 공개창구 : 서울 정보소통광장

□ 기타 비정형 문서

- 대 상 : 용역보고서, 업무계획, 연설문, 보도자료, 의회자료 등
- 공개현황 : 유형 정의 및 공개기준 미흡, 공개창구의 분산으로 공개의 사각지대 존재, 시민 접근성 부족

○ 추진방향

- 문서 작성 완료 후 5일 이내 공개 원칙
- 서울 정보소통광장으로 문서 공개 창구 일원화
- 해당 업무에 관한 대표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자동연계, 링크 활용

○ 문서 유형별 공개 수준

연번	유형		공개수준	총괄부서
1	실·본부·국 시정운영계획		계획원본	각부서
2	시정연 연구보고서		보고서원본	시정개발연구원
3	용역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용역원본 (비공개부분 제외)	조직담당관
		기술연구용역		기술심사담당관
4	보도자료		보도자료원본	언론담당관
5	회의자료		회의영상, 회의록 공개	총무과
6	연설문		연설문원본	시장실
7	의회 자료	업무보고서	업무보고서원본	각부서
		상임위 개최시 요구자료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공개자료원본	각부서

○ 추진일정

- 문서 유형별 공개 계획 (총무과, 총괄부서간 협의 조정): '12.12
- 각 문서유형별 공개시스템 연계 또는 구축 : '13년

○ 공개창구 : (자체 공개시스템 구축 후 연계) 서울 정보소통광장

5 기록정보 소통체계 정립 - 행정국

서울정보소통센터 설립 추진단 구성·운영

○ 구성

- 외부전문가(김익한 명지대 교수) 및 행정국장 공동 단장
- 이소연 덕성여대 교수 등 6명

○ 운영기간 : '12. 8월 ~ 정보소통센터 설립시

○ 주요기능

- 정보공개정책과 신설에 따른 업무기능 설계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서울기록원) 건립 계획 작성
- 기록정보 소통 혁신을 위한 로드맵 및 종합실천계획 수립
- 서울정보소통센터 업무 기능·조직 설계
- 서울기록문화관 전시기획 등 기타 기록관리 당면과제 추진 지원

○ 활동방향

- [업무혁신] 기록정보 소통을 기반한 업무혁신
- [기록관리] 업무 전 과정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기록정보소통체계 확립
- [정보공개] 대내외적 정보소통을 근간으로 정보공개·공표·고용
- [정책고객] 시민을 중심에 두고 일하는 방식으로의 혁신

(가칭)기록문화관 설립 운영

○ 설치장소 : 서울도서관 3층 290.5㎡(약 88평)

○ 주요기능

- 기록의 변천사와 서울의 역사를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전시
- 시정 주요 기록물 열람 서비스 제공 및 기록정보의 탐색도우미 역할
- 견학·전시 프로그램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공간 구성(안)

구 분		내용 및 시설
전시공간	서울을 기록합니다	· 사진, 문서, 동영상 등을 통한 동적인 전시 구성
	서울의 어제와 오늘	
기록물 열람공간		· 열람용 PC(4대), 마이크로필름 리더기(1대)
안내 및 사무공간		· 전시 및 일반안내 안내데스크, 사무공간

○ 운영 개시일 : '12.10(예정)

□ 기록원 건립 본격 추진

○ 추진근거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의무화(기록물법 제11조)

○ 주요기능

- 서울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 정책 수립 및 실행
- 서울시 중요기록물 및 민간기록물, 향토사료의 수집 보존 및 활용
- 기록물 대시민 공개서비스, 전시 및 편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그간 추진경위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 건립사례 검토 : '12.4월
- 설립예정부지(강서구 방화동) 부지 적정성 자문 : '12.4월
 - 자문의견 : 접근성 취약, 부지 허부에 지하철 관통 등의 사유로 대체부지 검토 의견
- 대체부지(마포구 성산동) 활용계획 협의 추진 : '12.4월~7월
 - ※ 공유재산경영위원회 상정·의결 : '12.8월중

○ 추진계획

- 보존대상 기록물 소요량 조사 : '12.12월
- 서울기록원 건립부지 확정 : '13. 2월
- 기록원 설립 운영방안 연구용역 : '13.4 ~ 13.9월
- 기록원 설립계획 수립 : '13.10월

6 서울 정보소통광장 구축 및 고도화 - 정보화기획단

□ 구축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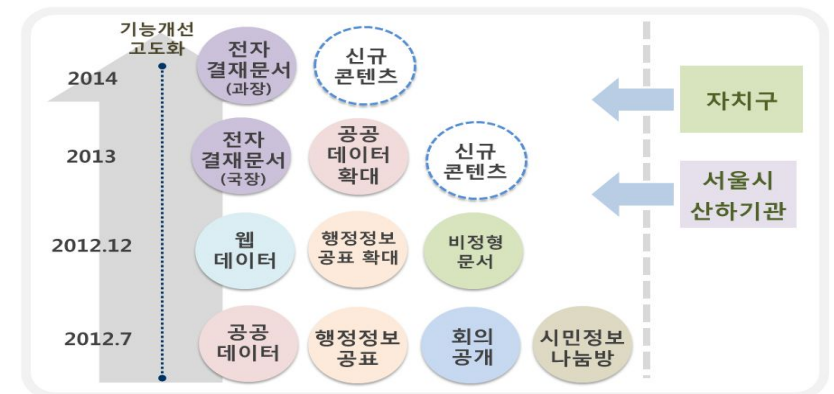
- 공개 가능한 모든 행정정보를 온라인 통합 단일 창구로 서비스
- 편리한 접근성, 이용 용이성으로 시민 알권리, 참여 증진

□ 운영방향

- 퍼즐 맞추기식 정보공개 ⇒ 단일한 포털 구축, 통합 공개
- 개별홈페이지(150개)의 자의적·선별적 정보공개
 - ⇒ 연관된 정보 함께 제공, 정보형식도 시민 친화적으로 제공
- 시 산하기관, 자치구 연계로 종합적인 행정정보 공개

□ 서비스 내역

- 행정정보 : 공표, 정책실명제, 기타 행정자료
- 공공데이터 : 열린데이터광장 링크
- 정보공개청구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 링크(전 공공기관 통합)
- 시민정보나눔방 : 시민제안방, 정보나눔방
- 회의공개 : 주요회의, 위원회 회의 공개



서울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시범 오픈 : '12.5.8~

서비스 주소 : <http://gov20.seoul.go.kr>



시범운영 기간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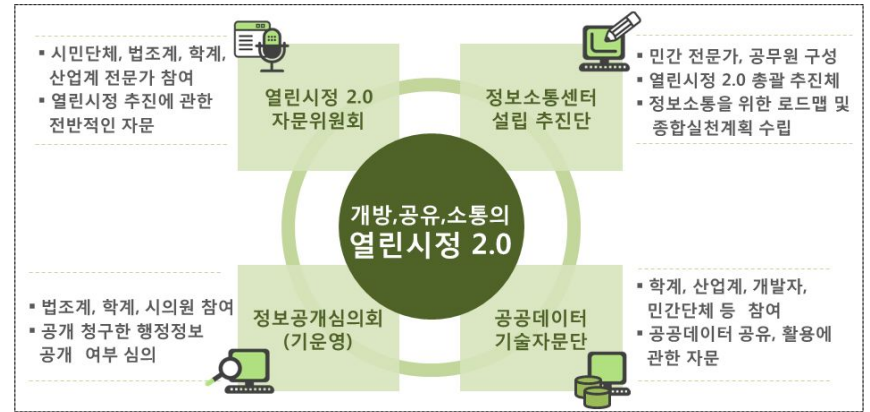
- 열린시정 2.0 자문위원을 통한 의견 수렴
- 직원 활용 안내 및 교육 : 회의관리자 및 주무팀장 등 220명 교육
- 행정정보공표, 위원회 회의공개는 서울시 메인 홈페이지 실제 서비스와 연계하여 조기 운영 정착

향후 계획

- 정보소통광장 정식 오픈 : '12. 8.22(수)
-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정보 발굴 및 단계적 확대
 - 홈페이지 웹 데이터, 전자결재문서, 비정형 문서 등
- 홈페이지 서비스 고도화
 - 개별공개 홈페이지간 연계, 신규콘텐츠 지속적 추가, 시스템 성능 보장
 -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행정정보공개 사이트와 효과적인 연계 표출

7 열린시정 2.0 민관 협력 추진

열린시정 2.0 민관 협력체계 구축



추진방향

- 각 위원회는 소관 분야 특성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활동, 이슈발생 또는 상호 필요시 긴밀한 협업체계
- 외부전문가(시민단체, 학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소관 운영부서

협력체계	소관부서	비고
열린시정 2.0 자문위원회	총무과	비상설 수시운영
정보소통센터설립 추진단	총무과	한시적 운영
정보공개심의회	총무과	기 운영(조례 有)
공공데이터 기술자문단	정보시스템담당관	비상설 수시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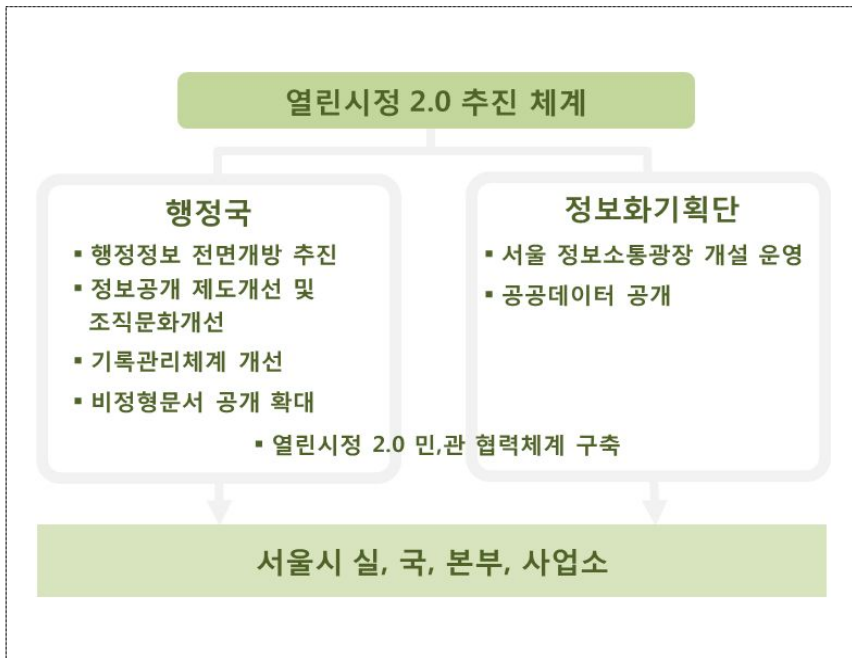
추진일정

- 정보소통센터설립 추진단 운영 : '12.8 ~
- 열린시정 2.0위원회, 공공데이터 기술자문단 구성 : '12.12월

VI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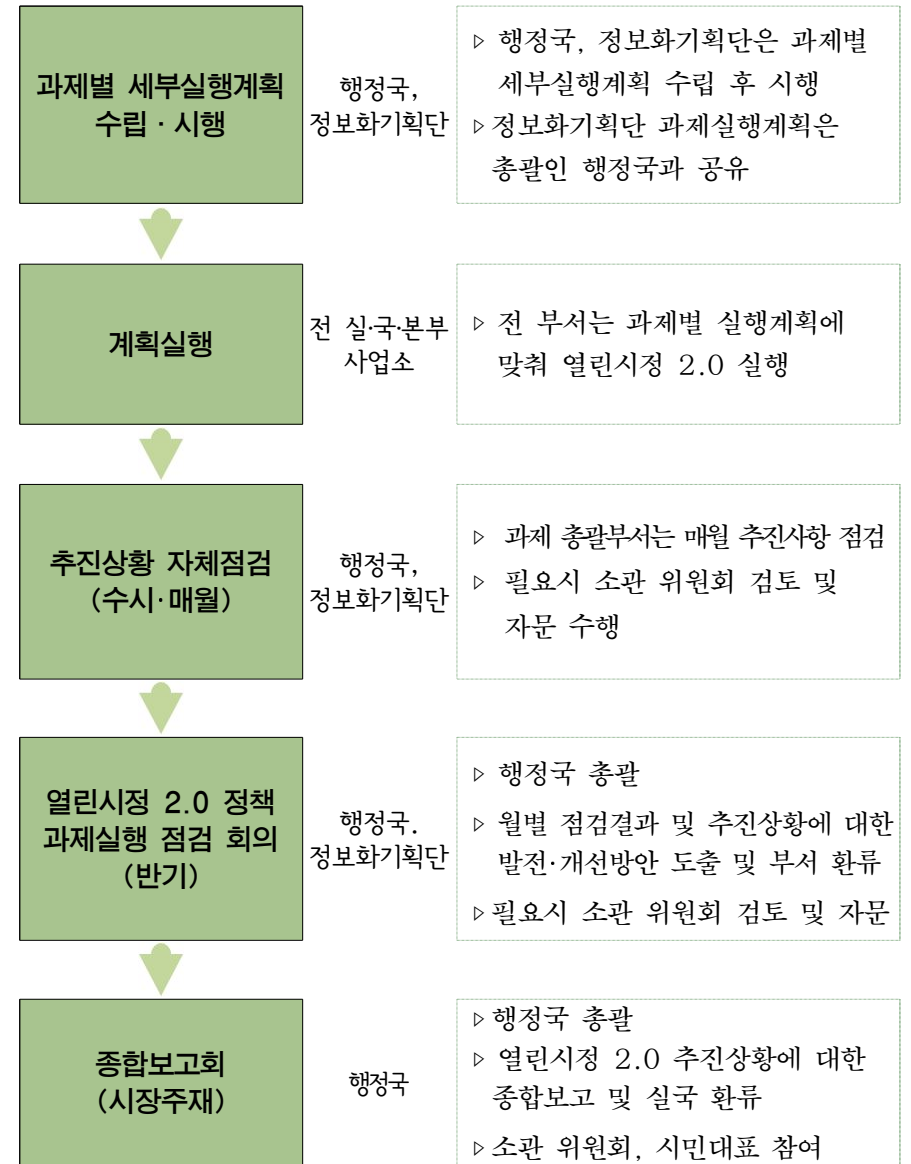
□ 열린시정 2.0 추진체계



□ 추진방향

- 행정국, 정보화기획단 이원체제로 열린시정 2.0의 차질없는 추진
 - [행정국] : 열린시정 2.0정책 총괄 추진, 주기적 점검·검토 및 보고
 - [행정국, 정보화기획단]: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수시·월·분기별 자체점검 및 추진 보고회 개최를 통해 실행력 확보

□ 추진절차



과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시행
 행정국, 정보화기획단
 ▷ 행정국, 정보화기획단은 과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후 시행
 ▷ 정보화기획단 과제실행계획은 총괄인 행정국과 공유

계획실행
 전 실·국·본부 사업소
 ▷ 전 부서는 과제별 실행계획에 맞춰 열린시정 2.0 실행

추진상황 자체점검 (수시·매월)
 행정국, 정보화기획단
 ▷ 과제 총괄부서는 매일 추진사항 점검
 ▷ 필요시 소관 위원회 검토 및 자문 수행

열린시정 2.0 정책 과제실행 점검 회의 (반기)
 행정국, 정보화기획단
 ▷ 행정국 총괄
 ▷ 월별 점검결과 및 추진상황에 대한 발전·개선방안 도출 및 부서 환류
 ▷ 필요시 소관 위원회 검토 및 자문

종합보고회 (시장주재)
 행정국
 ▷ 행정국 총괄
 ▷ 열린시정 2.0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보고 및 실국 환류
 ▷ 소관 위원회, 시민대표 참여

2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내용 및 일정	실행부서
행정정보 전면 개방		
행정정보 공표 확대	• 64종('12.7)→150종('14년)	총 무 과
전자결재문서 공개	• 정보공개 정책·기준 수립 및 관리 • 국장이상 결재문서 약 13,000건/년 : '13년 → 과장이상 결재문서로 확대 : '14년	총 무 과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공개 제도 개선 및 문화 조성		
정보공개 마인드 내재화	• 행정정보 공개의식 개선 교육 → 정례적 (반기1회 이상)	총 무 과
최대 공개기준 근거 마련	• 정보공개가이드라인 수립 : '12.9월 • 네거티브 방식의 행정정보 공개 조례 개정 추진 : '12.9	총 무 과
공공데이터 공유		
열린 데이터 광장 서비스 및 고도화	• DB 47종, 939 dataset : '12.7 → DB 150종, 1200dataset : '14년	정보시스템담당관
비정형문서 공개 확대		
회의공개 확대	• 주요회의 4종, 위원회 회의 92종 - 회의영상 및 회의록 공개 : '12.3~	총 무 과
기타 비정형문서 공개	• 문서유형별 공개수준 및 공개 방안 마련 : '13년	총 무 과
기록정보 소통체계 개선		
정보소통센터설립 추진단 구성	• 정보소통센터설립추진단 구성 : '12.8 • 서울기록문화관 설립운영 : '12.10	총 무 과
기록원 건립 본격 추진	• 서울기록원 부지 확정 : '12.12 • 기록원설립 운영방안 연구용역 : '13.4 • 기록원 설립 계획 수립 : '13.10	총 무 과
서울 정보소통광장 운영·고도화		
정보소통광장 포털 개설 및 운영 (회의록, 전자결재문서 등 공개)	• 정보소통광장 오픈 : '12.8 • 신규 콘텐츠 지속 서비스 : '12.8~ • 정보소통광장 고도화 : '13년	정보화기획담당관
열린시정 2.0 민관협력 추진		
열린시정 2.0 협력체계 구성운영	• 열린시정2.0 자문위원회 구성 : '12.12 • 공공데이터 기술자문단 : '12.9~12	총 무 과 정보시스템담당관

VII 소요예산 : 2,774백만원

과제명	내 용	소요예산
행정정보 전면 개방	전자결재문서 공개방 구축	820백만원
공공데이터 공유	데이터 발굴 및 시스템 고도화	1,725백만원
서울 정보소통광장 고도화	기능개선 및 콘텐츠 추가 타 홈페이지간 정보 연계 등 서버 및 DB 구매	229백만원

VIII 행정사항

열린시정 2.0 기자설명회 개최

- 일시 : '12. 8.22(수) 11:00

서울 정보소통광장 시민 오픈 : '12. 8.22(수)

- 행정국 : 콘텐츠 점검, 전 부서 정보 현행화 독려
- 정보화기획단 : 기능 최종 점검

열린시정 2.0 추진과제 실행 : 전 실국

- 행정국 : 각 추진과제별 실행계획 공유 및 추진현황 점검
- 전 실국 : 열린시정 2.0 실행계획에 따라 정보공개·공유 이행

- 별첨 : 1. 개방·공유소통의 열린시정 2.0 선언문 1부.
2. 기자설명회 발표자료 1부.

< 별첨 >

개방·공유·소통의 열린시정 2.0 선언문(안)

서울시에서 생산·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의 과정이자 결과물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의 안녕을 해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개방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울시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은 열람하는 과거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와 시민이 동등한 수준에서 정보를 보유한다는 정보공유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할 때, 시민이 서울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담은 “알권리 10대 원칙”을 선언하고 지침으로써 천만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희망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시민 알권리 10대 원칙 (안) ▶

1. 시민의 “알권리”는 시민의 “살권리”이다.
2. 서울시에서 생산·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시민의 재산이다.
3. 시민은 누구나 서울시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서울시는 정보를 생산·공개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정보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5. 서울시는 법령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정보를 비공개 할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6. 서울시는 중요 정보가 생산되는 대로 시민에게 정보의 내용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곳 등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7. 서울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보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한다.
8. 서울시는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한다.
9. 공무원(시 산하 출연기관 및 공사 임직원 포함)은 시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목적과 상관없이 성실히 응할 의무를 진다.
10. 공무원은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지며,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